

국회, 개원식 못열고 제헌절에 충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권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의사일정 파행 책임 공방 국힘, 특검 추진 '의회 폭거' 비판 민주 '대통령 거부권 헌법정신 파괴' 우 의장 "갈등에 개원식 못해 유감"

여야는 76주년 제헌절인 17일에도 22대 국회 의사일정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특검 추진 등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도 "협치와 합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헌법정신 파괴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사행권 통치를 남발했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 목소리는 절저히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청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다. 경축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5부 요인이 함께한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발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하고 제헌절을 맞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공영방송 범국민 협의회 구성하자"

우원식 의장, 여야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에 대해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위원회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가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농협, 설립 목적 맞게 역할·사업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양·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농협은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 보고에서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현했지만,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는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농가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농협 보유 부동산

이 약 8조 원 수준임에도 임대료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서울 강남의 290억원 부지를 26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어촌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부문' 사업은 복지문화 생활 지원 내용이 함께 포함돼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느껴진다"며 "복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교육복지지원부문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진숙 인사청문회, 정치 편향 공방 예고

방통위원장 후보 24·25일 MBC 재직시절 노조와 갈등 방통위 현안·2인체제 등 쟁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됐다. 관례상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를 실시해왔는데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를 청문회를 하면서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 등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크게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 노조와의 갈등, 퇴직 후 정치적 행보와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수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현안

과 2인 체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다. 여당은 "다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의 주도로 이를 청문회가 결정된 만큼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거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10년 전 MBC 사장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진입자 축소 등을 기재,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SNS에 2022년 MBC 취재

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 등을 언급한 일 등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및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과 관련해서는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 및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들을 고리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연합뉴스

문금주 "무기질비료 인상분 농민에 전가 안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무기질 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

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와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다.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